

오리 산업 현황 및 정부정책방향



III 임지현 주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오리 산업 현황

2007년 기준 오리생산액은 5,824억 원으로 축산업 생산액 11조2,773억 원의 5.2%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품목별 생산액 중에서는 15위, 축산물 생산액 순위로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오리 산업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오리사육수수는 2000년 5백만 수에서 2007년 11백만 수로 105%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가수는 2000년 13천호에서 2007년 7천호로 45% 감소하였으나, 2000년 호당 사육수수가 395수에서 2007년 1,463수로 270% 증가하여 급격한 규모화, 전업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리 산업의 문제점

첫째, 2003년 및 200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발생 직후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8년 4월 1일 봄철에 발생한 HPAI 로 인하여 4~7월 육용오리 평균 가격이 4,747원/3kg으로 전년 동기 5,534원/3kg 대비 14.2% 감소하였고, '08년도 육용오리 일평균 판

매량도 38.1천수로 전년도 평균 54.5천수의 70%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오리고기의 수급불안이 장기화된 원인은 질병 발생에 따른 오리고기 전문 음식점의 감소, 경기침체에 따른 외식산업 경기악화, 수입쇠고기 및 타육류 대체 등으로 분석된다.

둘째,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 오리육 계열업체들이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오리육 해외수출 확대에 노력하였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는 등 수출확대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수출량(농수산물유통공사 AG코드) : (2000년)221톤 → (2004년)1,459톤 → (2006년)361톤 → (2008년)109톤

셋째, 2006.12월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의 오리 산업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오리사의 형태는 조사농가의 70%가 간이돛형(보온덮개형)으로 대체적으로 단열, 유해가스, 환기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종오리의 생산성은 종란 생산수와 병아리 생산 수에서 영국의 체리베리 육종회사에서 제시된 성적의 81~94%, 75~95% 수준으로 이러한 요인은 사육환경, 사양기술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내 사육시설 개선 및 사양체계 확립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농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육용오리의 선대가 종오리(FS)인지 실용오리(F1)인지 알지 못하는 등 종오리와 실용오리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2007년부터 오리 임의자조금이 출범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정부지원 50백만 원, 거출금 50백만 원으로 규모가 작아 소비홍보, 조사연구 등 사업영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나, 2008년도에는 거출금이 250백만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양돈을 필두로 한우, 낙농의 의무자조금이 시행되고 있고, 양계분야(육계, 산란계)가 2009년도 하반기부터 의무자조금 시행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리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오리 의무자조금 출범에 대해

농가, 관련업계 등의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정책방향

●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정부에서는 고품질 오리고기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오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오리고기의 위생·안전성 제고 및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모든 도축장과 식육판매점에 단계별로 포장유통의 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8만수 이상 도계장 → (2008.6.22)5만수 → (2010)모든 도계·가공장 및 식육판매점

또한,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능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축계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 돼지, 닭 농장 HACCP 적용에 이어 오리농장에 대해서도 HACCP 적용에 대해 매뉴얼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인증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 종오리 개량사업 및 데이터베이스 확립

오리산업을 체계적인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종축업 등록·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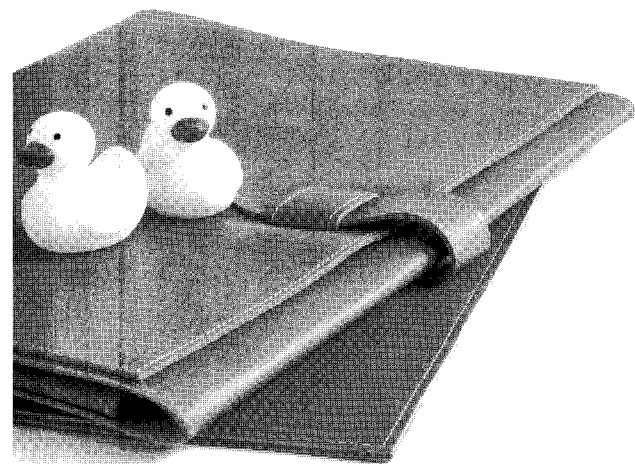
대상 가족·검정대상·수입신고대상에 오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2008. 12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으며, 현재 “오리검정기준”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종오리의 개념정립을 위하여 오리검정 중 일반검정(서류검정 및 개체 확인)만 우선 실시하고, 능력검정은 여건 및 필요성을 감안하여 추후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 심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원종오리(GPS) 사육을 통한 종오리(PS)생산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시설자금 융자 등)이며,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여금 국산 종오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종자오리입식 변동 상황, 사육마리수, 산란율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 정확한 오리수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리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질병관리기반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종자오리 농가의 과학적인 계절별 생산지표 파악에 의한 경영의 선진화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종오리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오리 산업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종오리 농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사업주관기관 : (사)한국오리협회, 2009년 예산 110백만원, 전년이월 65백만원

● 의무자조금 추진 및 대표조직 육성

2008년도에는 거출금이 250백만원에 이르는 등 자조금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정부에서는 거출금에 상응하는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오리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오리업계, 농가, 협회 등에서의 의무자조금 추진 시 그 시행이 원활히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지난해부터 논의해온 25개 품목 유통구조개선대책 및 대표조직 육성마련과 관련하여 오리 품목을 최근 추가하여 오리 산업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대책 및 대표조직 마련을 위해 생산, 유통, 소비 단계 전반에 이르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한국오리협회와 협의하여 마련 중에 있다.

동 방안에는 지난해 AI로 인해 오리농법 등을 활용·사육하는 청둥오리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동 대책에 청둥오리 분야에 대해서도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오리사업 통계 신규개발 및 축산관측에 오리 포함

소, 돼지, 닭에 대해서는 사육통계(가축통계)와 축산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나, 현재 오리 사육통계 및 관측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부족한 현실로 정책 수립 및 수급·가격예측 등 정책수립에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통계 신설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축산관측에 오리를 추가하여 다른 축종과 같이 매월 관측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오리소비확대를 위한 R&D 지원

닭고기는 치킨 등 다양하게 소비되는 반면, 오리고기는 주로 음식점에서의 소비가 대부분으로 경기침체 시 닭고기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오리고기의 90% 정

도는 냉장으로 주로 도심외곽 식당에서 소비되며, 오리고기 요리는 진흙구이, 훈제오리 등 제한적이다.

따라서, 오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오리고기 가공제품 및 프랜차이즈 외식산업 개발 등을 통해 오리고기 소비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는 총 360백만 원 예산 규모(정부지원 270백만 원, 오리협회 및 프랜차이즈 업체 부담 90백만 원)로 3년간 연구를 통한 오리고기를 이용한 기능성 육가공 제품 및 외식산업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연구가 마무리되면 소비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의 확대적용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 축종에 오리고기는 제외되어 있어 저가로 수입되고 있는 오리고기(대부분 중국산)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저질 오리고기로 인한 부정적 인식(맛, 냄새 등)이 커질 소지가 크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